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복기왕 의원

찬 성 자 : 31인

수정이유

본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 규정의 경우 하위법령과 연관되지 않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안 제21조제1항 개정규정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단서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단서 신설>	제1조(시행일) ----- ----- ----. 다만, 제21조제1항의 <u>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u> <u>시행한다.</u>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300세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5호나목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를 “시·도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있다”를 “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증가하는”을 “증가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세대수를 증가하는”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500미터 거리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의 세대수 중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세대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300세대
제4조제1항제5호 중 “제5조제2항”을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동의”를 “동(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을 “주택조합은”으로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권원을 확보할 것

가. 사유지: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계약으로서 그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나. 국·공유지: 사용권원

3.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결합하여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단지별로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의 각 과반수의 결의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에서”를 “조 및 제12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행업무를 병행하여 할 수 없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조합주택”을 “모집신고서 상 건설·공급계획에 따른 조합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조합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⑨ 제4항에 따라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해당 조합주택 건설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입안 제안으로 수립·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위 계획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의2. 사업비 구성표(토지매입비, 공사비, 업무대행비, 금융비용 등 구분) 및 구성항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의3. 모집신고 당시 해당 사업예정부지의 지구단위계획(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사항

3의4. 제11조의3제9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 등) ① 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모집주체 및 주택조합(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집주체 및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임원 또는 발기인은”을 “임원, 발기인 또는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결의하는”을 “결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조합의 임원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해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주택조합이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선임된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공사비 검증요청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검증기관”이라 한다)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

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 이전에 시공자를 선택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 이후에 시공자를 선택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검증기관은 주택조합등과 시공자에게 산출내역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등과 시공자는 검증기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검증기관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주택조합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택조합등은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한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주택조합등이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사비의 증액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등 또는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 증액기준, 설계변경 범위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주택조합등과 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21조제1항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를 “지구단위계획의”로, “95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제3항 중 “들어야”를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허가에 따른 공사의 착수 및 허가의 취소는 제16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행위 허가”를 “리모델링 허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수 증가 범위의 종합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67조 중 “행위허가”를 “리모델링 허가”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시장”을 “시·도지사, 시장”으로 한다.

제76조제6항 전단 중 “권리변동계획에”를 “이전고시·권리변동계획에”로, “확정”을 “확정·등기절차”로, “제87조를”을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는 “제66조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변동계획”으로, “정비사업”은 “리모델링”으로, “준공인가”는 “사용검사”로,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결의하거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결의하거나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제2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위허가”를 “리모델링 허가”로 한다.

제9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의5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

제101조제1호 중 “제11조의2제1항”을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10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조의2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비 증액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4의3.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합총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한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

제104조제4호의2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3 중 “제14조의2제3항”을 “제14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6.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비 검증결과를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 정의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제20호의 개정규

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제5항·제9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조합업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조합사업비의 총회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조합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이전고시)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해산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날(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이전고시가 있는 날)로 본다.

제8조(공사비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결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3항에 따라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제11조(주택조합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

2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병
행하여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u>300세대</u>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9. (현행과 같음) 20.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수</u> ----- ----- -----. <u>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500미터 거리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의 세대수 중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u>

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 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 -----

----- 증가하거나 주거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6. ~ 29. (생략)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26. ~ 29. (현행과 같음)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
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
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생략)

② (생략)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
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
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
용권원을 확보할 것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제5조제2항-----
-----)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
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권원을 확보할 것

가. 사유지: 소유권 또는 매매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
항에 따라 신고된 매매계약
으로서 그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
한다)

2.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생략)

나. 국·공유지: 사용권원

2. (현행과 같음)

③ -----

-----.

1. -----

-- 동(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⑤ (생략)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3.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결합하여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단지별로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주택조합은-----

-----.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
----- 조
및 제12조의2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1. ~ 6.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행업무를 병행하여 할 수 없다.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

----- 80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권원----

--.

② ~ ④ (생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생략)

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신설>

3. 4. (생략)

⑥ ~ ⑧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

----- 모집신고서 상 건설·공급계획에 따른 조합주택-----

2의2. 조합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3. 4.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4항에 따라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해당 조합주택 건설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4. (생략)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입안 제안으로 수립·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위계획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사업비 구성표(토지매입비, 공사비, 업무대행비, 금융비용 등 구분) 및 구성항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의3. 모집신고 당시 해당 사업예정부지의 지구단위계획(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사항

3의4. 제11조의3제9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신설>

<신설>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 ④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주택조합 사업비의 총

회의결 등) ① 주택조합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생산자 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모집주체 및 주택조합(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집주체 및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

-사업계획승인(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택조합의 임원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해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신 설>

<신 설>

으로 의결한다.

④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주택조합이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⑤ (생략)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
-----임원, 발기인
또는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

-----.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 결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가 취소된 -----

----- 다만,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
수·구청장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선임된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⑨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조의5(공사비 검증요청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검증기관”이라 한다)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검증기관은 주택조합등과 시공자에게 산출내역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등과 시공자는 검증기관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검증기관은 공사비 검증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주택조합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택조합등은 공사비 검

증보고서를 총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한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주택조합등이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사비의 증액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등 또는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 증액기준, 설계변경 범위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주택조합등과 시공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사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5. (생략)

<신 설>

<신 설>

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

-----.

1. ~ 25. (현행과 같음)

26.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신 설>

② ~ ⑤ (생 략)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
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
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
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
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
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

1. 지구단위계획의-----

-----80퍼센트-----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 4. (생략)

② (생략)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⑨ (생략)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용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

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

⑦ (생 략)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u>행위허가</u>를 취소할 수 있다. ⑨ (생 략)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u>행위허가</u>를 받아야 한다.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u>시장</u>·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	<u>가 범위의 종합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u>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u>리모델링 허가</u>----- -----. ⑨ (현행과 같음)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 ----- ----- ----- ----- ----- ----- <u>리모델링 허가</u>-----.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u>시·도지사, 시장</u> ----- -----
---	--

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 ~ ⑤ (생략)

⑥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
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
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분
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
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반에
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
물”은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
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
물”로 본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
른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전고시 · 권리변동계획에-

-----확정 · 등기
절차-----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
를----- . - 경우 “사업시
행자”는 “입주자 · 사용자 · 관
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제83
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
가 있을 때”는 “제66조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변동계
획”으로, “정비사업”은 “리모델
링”으로, “준공인가”는 “사용검
사”로, “시장 · 군수등”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신 설>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생략)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결의하거나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청문) -----

-----.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 제5항-----
3. (현행과 같음)
4. ----- 리모델링 허가---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 3. (생략)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1. 제14조의5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받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임직원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101조(벌칙) -----

--.

1.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7항 -----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4의2. <u>제14조제4항</u>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u>제14조의2제3항</u>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 4의5. (생략) <u><신설></u> 5. ~ 14. (생략)	----- -----. 1. ~4 . (현행과 같음) 4의2. <u>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u> ----- 4의3. <u>제14조의2제6항</u>----- ----- ----- 4의4. · 4의5. (현행과 같음) 4의6. <u>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비 검증결과를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또는 입주자대표</u> 5. ~ 14. (현행과 같음)
--	--